

「2018년 1월 20일 시행」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 명	

문제책형
A

【인문사회계열 : 필수과목】

제 1 과 목	제 2 과 목	제 3 과 목
헌 법	한 국 사	행 정 법

응시자 준수사항 (필수·선택과목 공통)

☞ 시험문제지를 받으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지 표지에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답안지의 책형란에 문제지의 책형을 기재·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아니되며, 시험시작 즉시 과목 편철 순서, 파손, 인쇄상태, 매 페이지의 동일책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표지 포함) : 필수과목 총 26페이지, 선택과목 총 31페이지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시험 중에는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4. 문제지(전부 또는 일부)는 가져갈 수 없으며, 시험종료 즉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앙소방학교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 헌법 】

1.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②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④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 ⑤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2. 관습헌법으로 성립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반복성
- ② 계속성
- ③ 항상성
- ④ 추상성
- ⑤ 국민적 합의

3.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아니다.
- ②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종교상의 의식·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 ③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 있다.
- ④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한다.

4.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② 영전수여
- ③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④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⑤ 탄핵심판 청구, 각부 장관의 임면

5.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 ② 공상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공무원과 비공상장해 공무원은 폐질상태로 인하여 보호를 받을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점이 같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 평등원칙에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는 선택의 문제는 입법자에 맡겨진 것이다.
- ④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이 「헌법」 제11조 제2항에 반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거나 창설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6. 법원의 구성과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없다.
- ② 대법원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없다.
- ③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7.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②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 각 부의 장 · 헌법재판소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8.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상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된다.
- ② 헌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이다.
- ③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그 구성원이 아니다.
-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⑤ 감사원은 원장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9.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④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 ⑤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11.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 ②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④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다.
- 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12.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하지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국회법상 인사청문의 대상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가 포함된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⑤ 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3.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인 근로자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근로의 권리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후자는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바, 직장변경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규정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 ④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⑤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헌법 전문(前文)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③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 ④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 ⑤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15. 헌법상 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법원장처럼 국회의 동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6.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④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17.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현직 대통령이 발의할 수 없다.
- ④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 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의 원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8.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법상 권리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②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효의 입법이고, 소위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③ 모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지만, 보상할 필요는 없다.
- ④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규율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 ⑤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19. 대통령의 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④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0. 국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④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⑤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로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21.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을 임명한다.
- ④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2.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법인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 ②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평등권에서 도출되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 ⑤ 법인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않고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23.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②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③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위임 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 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4.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③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필요한 경우 허용된다.
- ④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25.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평등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입법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 ②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 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③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확인애 그친다.
- ④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 ⑤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의 평등을 의미할 뿐, 법 제정의 평등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한국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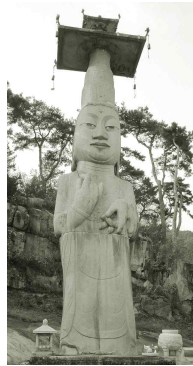
1. 조선 전기의 지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 ② 속현은 향리가 실무 행정을 담당하되 인근 주현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 ③ 향리들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지위가 낮아졌다.
- ④ 지방의 유력한 양반들로 유향소를 구성하여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게 하였다.
- ⑤ 향·부곡·소를 없애고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

2.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나)



(다)

<보기>

- ㄱ. (가) - 통일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으로 축조되었다.
- ㄴ. (나) - 신라 하대에 건립된 것으로 호족 세력의 성장을 보여준다.
- ㄷ. (다) - 신선들이 사는 이상 세계를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 ㄹ. (다)-(가)-(나) 순서로 제작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일삼던 몽골은, 고려를 방문했던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침략하였다.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가)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하였다.

- ① 청해진 유적이 남아 있다.
- ② 탐라총관부가 설치되었다.
- ③ 러시아가 조차를 요구하였다.
- ④ 양명학을 연구하는 학파가 형성되었다.
- ⑤ 삼별초가 몽골에 항전하는 마지막 근거지였다.

4. 밑줄 친 ‘임금’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의 명을 받아 기병 5천 명과 보병 1만 명이 동북면으로부터 황초령을 넘어 압록강을 건넜다. (중략) 당시 동녕부(東寧府)의 이오로 테무르는 이 소식을 듣고 우라산성으로 이동해 들어간 다음 험한 지세에 의지해 저항하다 투항해 왔다. 여러 성들도 모두 투항해 오니 1만을 넘는 민호가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동쪽으로 황성(皇城), 북쪽으로 동녕부, 서쪽으로 바다, 남쪽으로 압록강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에서 적이 일소되었다.

- ① 과전법이 마련되었다.
- ② 주전도감이 설치되었다.
- ③ 연경에 만권당이 설립되었다.
- ④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 ⑤ 고려·몽골 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하였다.

5. 밑줄 친 ‘임금’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찬 이사부가 아뢰어 말하였다. “나라의 역사는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은 것 나쁜 것을 먼 후손에게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역사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임금이 진심으로 그렇다고 여겨 대야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문사들을 널리 모아 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 ① 사정부를 설치하였다.
- ② 대가야를 복속시켰다.
- ③ 국호를 신라로 정하였다.
- ④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⑤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권을 확립하였다.

6.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국(大韓國)과 대청국(大清國)은 우호를 돈독히 하고 피차 인민 돌보기를 절실히 원한다. (중략) 앞으로 대한국과 대청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며 양국 상인과 인민이 거류하는 경우 모두 온전히 보호와 우대의 이익을 얻는다. (중략) 재한국 중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영사관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재중국 한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한국 영사관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 ① 포츠머스 조약의 영향을 받았다.
- ② 대한 제국이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였다.
- ③ 독립서고문과 홍범 14조가 반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④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시기에 조인되었다.
- ⑤ 양화진에 청 상인의 상점 개설에 관한 내용이 있다.

7. (ㄱ), (ㄴ)에 들어갈 관청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난민(亂民)이 크게 일어나 먼저 (ㄱ)과 형조를 불태웠으니 이는 두 곳의 관서에 공사노비(公私奴婢)의 문적(文籍)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헌부, 사간원, (ㄴ)의 3사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3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ㄱ)	(ㄴ)
①	장례원	승문원
②	예문관	승문원
③	장례원	홍문관
④	예문관	홍문관
⑤	교서관	승문원

8. (ㄱ)의 시행이 가져온 결과로 옳은 것은?

(ㄱ)의 시행으로 인해 결수(結數)가 많은 백성은 일시에 마련해 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중략) 호서에 (ㄱ)을/를 시행한 뒤로 호서에서 바치는 약재를 서울에서 사 납부하는데, 그 품질이 좋지 못한 데다 그로 인해 각 고을에서 약재를 캐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팽개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약재 이름도 모르게 되겠으니 응당 변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 ② 관영 수공업이 더욱 발전하였다.
- ③ 양반도 군포를 납부하게 되었다.
- ④ 지주는 토지 1결당 쌀 4 ~ 6두를 납부하였다.
- ⑤ 일부 상류층은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9. 대한 제국 시기의 애국 계몽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양의 사회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 ② 민족의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을 주장하였다.
- ③ 개화 자강 운동을 계승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④ 경제적 실력 양성으로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대한 자강회 등의 단체가 있었다.

10. (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종 5년 11월 김익희가 상소하였다.
 “임시로 (ㄱ)을/를 설치하였는데 재신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다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의정부는 한갓 이름만 지니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 방비를 담당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과거 시험에 대한 판정이나
 왕비나 세자빈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 ① 세종 때 4군 6진을 개척하기 위해 처음 설치했다.
- ②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ㄱ)의 구성원은 3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으로 확대되었다.
- ③ 세도 정치 시기에 세도 가문들의 정권 유지 기반이 되었다.
- ④ (ㄱ)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왕권이 약화되었다.
- ⑤ 흥선 대원군은 (ㄱ)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정부와 삼군부로 나누었다.

11.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현과 종루, 그리고 칠패는 도성의
3대 시장이라네.

온갖 수공업자가 다 모여 사람들은
분주한데 수많은 화물이 값을 다투며
수레가 줄을 이었네.

봉성의 털모자, 연경의 비단실, 함경
도의 마포와 한산의 모시, 쌀, 콩, 기장,
조, 피, 보리……

- 박제가의 <한양성시전도가> 中에서

- ① 지방 장시들은 보부상들에 의해 유통망이 상호 연계되어 갔다.
- ②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새롭게 성장한 사상으로는 내상, 경강상인이 있다.
- ③ 포구에서는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업 활동을 벌였다.
- ④ 공인들 중에서 일부는 도고(都賈)로 성장하였다.
- ⑤ 상업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2. 다음과 같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일의 크고 작음이나 가볍고 무거움이 없이
모두 6조에 붙여져 의정부와 관련을 맺지
않고 의정부의 관여 사항은 오직 사형수를
논결하는 일뿐이었다.

- ① 집현전 설치
- ② 규장각 설치
- ③ 호패법 실시
- ④ 경국대전 편찬
- ⑤ 의정부 서사제 실시

13. 아래 조약을 체결하게 된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은?

제1조 지금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고 그 수괴를 엄히 징계한다.
제2조 조선은 5만 원을 지불해 피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그 가족들, 부상자들을 특별히 돌보아 준다.
제5조 일본공사관에 약간의 군사를 두어 경비하게 한다.

- ① 청이 뮌헨도르프를 외교 고문으로 파견한 이유를 조사한다.
- ② 14개조 정강 내용을 분석한다.
- ③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한 배경을 알아본다.
- ④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배경을 조사한다.
- ⑤ 조선중립화론이 제기된 이유를 파악한다.

14. (ㄱ)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
(ㄱ)
↓
급진 개화파 중심으로 갑신정변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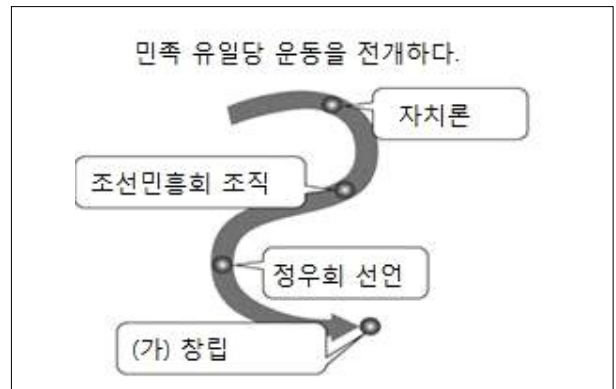
- ① 정부에서는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 ② 일본에는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여 근대 문물을 시찰하였다.
- ③ 서양 국가로는 최초로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 ④ 유생들은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대하여 ‘영남 만인소’를 제출하였다.
- 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영국은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15. 밑줄 친 문벌 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종 이후 중앙 집권적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었다. 이들 중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관직을 배출한 가문을 문벌 귀족이라고 하였다.

- ①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공음전을 받아 안정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였다.
- ② 대농장을 경영하였으며,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③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을 수용하였으며, 불교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 ④ 왕도정치를 추구하였으며, 향촌자치를 강조하였다.
- ⑤ 골품제를 통해 여러 가지 신분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16. 아래의 빈칸 (가)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순종 인산일을 계기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 ②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 ③ 조선청년 총동맹의 결성에 영향을 끼쳤다.
- ④ 코민테른 노선 전환으로 사회주의자들이 해소를 주장하였다.
- ⑤ 문맹 퇴치를 위하여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17. 다음의 (ㄱ), (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체	강령
(ㄱ)	3. 우리나라의 토지 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중략)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 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6. 삼군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 하였으니 (중략)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없어지고 소수민족의 침몰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 권리를 균화하여 고저를 없이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한다.
(ㄴ)	본 동맹은 조선 독립을 위해 분투하는 하나의 지방단체로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 혁명운동에 적극 참가하며, 아래와 같은 임무를 규정한다. (3) 중국, 특히 화북 각지에 거류하는 조선 동포의 정치·경제·문화적 이익을 위하여 분투한다. (6) 일본 파시스트의 중국 침략에 반대하며 중국의 항일 전쟁에 적극 참가한다.

- ① (ㄱ) - 김두봉을 주석으로 선출하였다.
- ② (ㄱ) - 팔로군과 연합 전선을 형성하였다.
- ③ (ㄴ) - 좌우 합작 단체로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 ④ (ㄴ) - 민족 연합 전선 형성에 나서 민족 혁명당을 결성하였다.
- ⑤ (ㄱ), (ㄴ) -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 군대의 일부 병력을 수용하였다.

18.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속한 인물과 활약상으로 옳은 것은?

내정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 누구이나? 너희들이 ‘동양 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조건으로 내건 조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던 역사를 잊었느냐?

(중략)

민중은 우리 혁명의大本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속으로 들어가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 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 ① 안중근 -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
- ② 이봉창 - 도쿄에서 일본 국왕이 타고 가던 마차에 수류탄 투척
- ③ 김상옥 - 서울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
- ④ 강우규 - 서울역에서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 투척
- ⑤ 이재명 -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을 습격

19. (ㄱ)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54년 자유당은 (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1표 차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자유당은 사사오입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 통과를 선포하였다.

- ① 부통령제를 신설한다.
- ②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 ③ 양원제 의회 구성과 내각책임제를 실시한다.
- ④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없앤다.
- ⑤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한다.

20. 다음 연설을 한 인물의 집권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중국 주석의 초청으로 나흘간의 중화인민공화국 공식 방문길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는 저는 한·중 두 나라가 걸어온 지난 날을 생각하며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중략) 이제 한국과 중국은 지난 달 수교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 새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 ①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다.
- ② YH 무역 사건이 일어났다.
- ③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다.
- ④ 내각 책임제 헌법이 제정되었다.
- 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21.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년 전 기미년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 경성과 같이 큰 도시에는 소방서를 설치하지는 요구가 들끓었다. 사이토 총독은 예산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지만, 재작년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의 영향으로 소방서 설치를 원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결국 총독부는 경성소방서 신설을 결정하고 어제 4월 1일자로 경성소방서 규칙을 제정하였다.

- ① 6·10 만세 운동에 참여하는 상인
- ② 국민 대표 회의에 참석한 독립 운동가
- ③ 보통학교 5학년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
- ④ 근우회가 개최한 강연회를 취재하는 기자
- ⑤ 조선 농민 총동맹 결성식에 참여하는 농민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문이 발행될 당시의 사회,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3일 하오 2시쯤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평화시장 앞길에서 평화시장 재단사 친목회원 전태일 씨가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분신자살을 기도, 이날 하오 10시쯤 숨졌다. 전 씨는 “기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15, 16세의 어린아이들이 일요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혹사당하고 있으니 이런 사태를 시정해 달라.” 라고 호소, 미리 준비했던 휘발유로 『근로기준법 해설』이란 책을 태우려다 제지를 받고 자기 몸에 불을 지른 것이다.

- ① 정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었다.
- ② 3저 호황을 맞이하여 수출이 증가하였다.
- ③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 ④ 야구, 축구 등에서 프로 스포츠가 등장하였다.
- ⑤ 밀가루, 설탕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가 증가하였다.

23. 다음과 같은 장례 풍속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들은 장사를 지낼 적에 큰 나무 꺾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丈)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가매장을 하되, 가족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꺾(槨) 속에 안치한다. 온 집안 식구들을 모두 하나의 꺾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무에 모양을 새긴다.

- 《삼국지》 위지 동이전

- ①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 ② 철이 많이 생산되어 이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하였고, 낙랑, 왜 등으로 수출하였다.
- ③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였다.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다 클 때까지 길러 아내로 삼았다.
- ④ 산천을 중요시 여겨 산과 내마다 각각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 소, 말로 배상하게 하였다.
- ⑤ 여러 나라에는 각각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고 하였다. 거기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겼다.

24.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기>

- ㄱ. 관습적인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ㄴ.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로 시행되었다.
- ㄷ. 미곡 공출량을 늘리기 위해 실시되었다.
- ㄹ.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

-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5. 다음 연설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조국 분열의 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주의 통일독립을 전취할 대계를 서로 토의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현재 통일독립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는 소위 단선단정(單選單政)입니다. (중략) 단선단정 분쇄를 최대의 임무로 삼고 모인 이 회합은 반드시 전 민족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하여야 할 것이니, 이 회의는 반드시 성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1945.8	1945.12	1946.2	1946.7	1947.11	1948.10
	ㄱ	ㄴ	ㄷ	ㄹ	ㅁ

광복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개최	북조선임시 인민위원회 조직	좌우합작 위원회 결성	유엔한국 임시 위원단 구성 결의	여수순천 10.19 사건 발생
----	------------------------	----------------------	-------------------	----------------------------	------------------------

- ① ㄱ ② ㄴ ③ ㄷ
- ④ ㄹ ⑤ ㅁ

【 행정법 】

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비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하다.
- ②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또는 무조건으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에 면허관청은 매립을 면허하는 경우에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부관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곧바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고 볼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②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③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담당 소방공무원이 구술로 행정명령을 고지한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④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 ⑤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
- ②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 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 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 점포 중 개설자의 직영매장 이외에 개설자 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대매장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전체 매장에 대하여 법령상 대규모 점포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개설자만이 처분 상대방이 되고, 임대매장의 임차인이 별도로 처분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통지· 의견청취절차는 원고(대규모 점포 개설자)를 상대로 거치면 충분하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 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 ③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조직으로서, 그 업무가 국가 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 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각 시험마다 시험의 목적, 응시자격 등이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정보의 공개범위 등에 관하여 추상적 기준만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시험 주관기관의 전문적·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중 제1심 공판정 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5.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칙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뢰보호원칙은 신의칙 혹은 법적안정성에 근거를 둔 원칙으로 확고한 불문의 법원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실정법에 명문으로 이러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 ② 신뢰보호원칙은 위법을 감내하고서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상대방의 신뢰이익은 항상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에 우선한다.
- ③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후, 위반자에게 다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④ 행정청의 언동은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의 것일 필요는 없으므로 병무청의 민원상담 공무원으로부터 보충역편입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으나 실제로 현역 입영관정을 받았다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 ⑤ 호적상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36년이 지난 후, 정년이 임박해서 호적 정정 및 정년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④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7. 행정절차상 의견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 등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을 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8.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협발생 방지조치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②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 처분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 ④ 산림을 무단 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할 수 있

다고 보아야 한다.

- ⑤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9. 「소방기본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10.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것이고, 취소소송의 판결은 유효한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형성소송에 속한다.
- ②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 잡은 과세처분의 하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다.
- ③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조직법상 의미의 행정청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행정청이라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11.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조사의 실시는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조사원은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상호 협의하여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즉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행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사실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이에 대한 법률상 규정도 없으며, 다만 판례가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② 행정청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특정 업소에 전기를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 이러한 요청은 행정지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 ④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⑤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행정지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지도가 한계를 넘어서 위법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정지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13.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
- ③ 고의·과실의 유무는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
-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 라고 함은 인권존중·권력 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14. 행정상 신고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의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행정청은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다.
- ② 대법원은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현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이므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해도 처분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신고서를 심사한 후 수리행위가 있어야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것이 되므로 수리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신고필증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④ 체육시설인 볼링장이 들어설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고, 반려한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된다.
-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이 신고서를 심사한 후 일정한 신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한 것은 수리와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15. 행정입법의 위임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임 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위임조문 자체에서 직접 이러한 구체성의 정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했다면 조세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규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구 「사법시험령」은 집행명령이므로 동 명령에서 과락제도를 두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처벌규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위임이 허용될 수 있으며, 형벌의 종류와 형량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자치입법에 대한 위임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하지만, 공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6.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국유하천부지는 자연상태 그대로 공공용으로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 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일반재산으로 된다.

③ 공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④ 보존용재산이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⑤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17. 행정청의 권한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유원지에 관한 도시 계획시설결정 후, 이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더라도 종전 결정을 변경할 권한은 여전히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다.

② 위임은 위임기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 또는 대등한 행정기관에 대해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 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연 무효 이다.

④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위임기관은 자신의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 위임한 경우 지휘·감독권을 갖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아니한 하급기관이나 수탁 기관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정부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③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 ④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 ⑤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 행정소송 중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권리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 등 처분의 효력발생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환지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 변경할 길이 없다.
- ② 시장건물 부지로 제공되어 있는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는 없으므로 위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축조하려고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③ 정년의 초과 또는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설사 면직처분이 무효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에 미흡하여,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⑤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20. 국가배상제도에서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업주들로부터 뇌물수수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국가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경매법원 공무원의 공유자 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 과오는 경락인의 손해 발생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

③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가족구성원이 위협받고 있던 중, 다른 가족구성원이 경찰관서에 3차레나 출동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동하지 않아 무장공비에 의해 가족구성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

- ④ 경찰서 대용감방에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을 예방하거나 폭력행위 등을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유흉주점에 화재가 발생하여 여종업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위 유흉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널리 지방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그 고유사무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인바, 기업체의 생산실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무는 달리 법령상의 위임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의 복지를 위한 고유사무처리에 수반하여 하는 사실증명 업무라 할 것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비록 법령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위의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상 그 신청은 면제의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전제나 제약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위반된다.

22. 행정절차상 공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표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표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공표를 규정하는 법률도 당연히 비례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 ④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성 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 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

- ⑤ 위법한 공표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공표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 법적 효과의 취소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취소 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23.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경재결이 있으면 원처분이 변경재결로 변경되어 존재하는 것이 된다.
- ②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라도 행정청이 재처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 및 재결이유 중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처분의 효력판단에 한정된다.
- 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2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이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영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일반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뢰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 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⑤ 행정청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삭제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삼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6호는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5. 경찰권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 범위
내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
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의 제지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
았음에도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
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